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연구용역 최종 보고

-대전광역시 재정분석과 기본소득 실현방안-

2021. 11. 29

(사)대학정책연구소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이론적 검토	3
1) 기본소득의 개념	3
2) 기본소득 기원 및 역사	4
3) 기본소득의 찬반양론	6
3. 연구모형의 도출	8
II.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	12
1. 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	12
1)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배당기금(The Alaskan's Permanent Fund)	12
2) 브라질의 Bolsa Família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ília)	13
3) 나미비아의 기본소득(BIG: Basic Income Grant) 실험	15
4)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6
2. 국내 기본소득 실험 사례	18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험 사례	18
2)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실험 외 사례	19
3)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기본소득 사례	20
4) 재난기본소득 지급사례	22
3. 소결	25
III. 대전광역시 현황 및 재정분석	29
1. 대전광역시의 현황	29
2. 대전광역시 재정 분석	31
IV. 대전광역시 기본소득제도 설계	37
1. 대전시 기본소득의 목적	37
2. 대전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도(안) 설계	38
3. 대전시 기본소득제도 법제화	41
V. 결론	42
<부 록>	46

〈표 목차〉

<표1>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충족하는 5가지 요소	3
<표2> 주요 광역자치단체 농민수당/노인기본소득 현황	20
<표3> 기본소득 정책/실험 분류	25
<표4> 완전기본소득 5요소, 시간-공간 충족 현황	28
<표5> 2020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세부내역(단위: 억원)	32
<표6> 기본소득 중복 금액 세부 항목(단위: 억원)	36
<표7>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도(안) 산출근거(대전)	38
<표8>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지급안-기존 복지예산 및 추가예산(대전지역)	40

〈그림 목차〉

<그림1> 시공간 상호작용에 따른 인간 활동의 진화(기대효과)	9
<그림2> 시공간 상호작용에 따른 기본소득의 진화(기대효과) 및 연구모형	10
<그림3> 대전형 기본소득 실현방안 연구 프로세스	11
<그림5> 대전광역시의 전년대비 2020년 재정상태	31
<그림6> 주요 광역시도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32
<그림7> 2016-2020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잉여금 추이	33
<그림8> 대전광역시의 2020년 부문별 세입현황	34
<그림9> 대전광역시의 2020년 부문별 세출현황	34
<그림10> 2020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세출 중 기본소득 중복 금액	35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노동 없는 세상, 또는 문명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및 메타버스(Metaverse)시대의 도래는 그 어느 시기보다 국민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각계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사회-정치를 상호 연결하는 다차원적인 접근 속에서 여러 대안적 사유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글로벌 탈근대의 노동과 사회, 정치성에 관하여 이미 심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나 올리히 벡의 해설은 ‘전 지구 양극화’와 ‘노동 없는 임금노동 사회’에 갇혀있는 현재의 구조적 상황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그들은 과거 부자들은 부자가 되거나 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부와 빈곤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¹⁾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 저출산,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 문제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 이어 실천적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술적 연구와 그 연구결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변화가 일어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정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1986년 유럽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는 2020년 현재, 35개 나라와 지역 회원을 확보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국제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에 관한 홍보, 학술 연구, 실험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²⁾ 미국 알래스카주 완전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부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다. 위 실험들은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며 기존 복지제도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시대와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시회의 연구비 후원과 유클리드소프트(EUCLID SOFT)의 자료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올리히 벡 저,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 거름, 2000.; 임미원, “아렌트의 탈노동적 정치 관념과 기본소득 구상”, 『법학논총』, 36(4), pp. 1-4.
- 2) 2020년 현재 회원 국가 및 지역은, 유럽(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캐나다 퀘벡, 타이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35개를 유지하고 있다.
https://basicincomekorea.org/introduction_bien/

대전광역시는 인구 153만 명의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대표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2014년 이후 수도권 집중과 세종특별시로 인구유출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증가는 정체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0-40대 청·장년층의 정착과 유입에 방점이 찍힌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³⁾ 그 해법의 일환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2021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기본수당은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효과 역시 미지수다.

인구는 방추형 구조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연령대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대전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 인구 감소폭이 뚜렷하고, 코로나 시국에 따른 혼인 건수 감소와 함께 0~4세 영·유아 숫자 역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 위의 인구 구조와 부합하는 지역은 대덕구로, 지역인구 176,384명 중 0~4세 영·유아는 4,620명, 전체 인구 대비 2.6%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⁴⁾ 대전은 기본적으로 경부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과 영남, 호남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광역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진 지역이다. 재무구조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세입 6조 5천억여 원, 세출 5조 8천억여 원으로, 7천억여 원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 잉여금의 규모 평균이 6992억 원에 달할 정도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⁵⁾

본 연구는 대전의 지리적 특성과 재무상태, 인구구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전형 기본소득(범주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적 기본소득 실험과 국내 여러 기본소득 실험 연구에 비춰볼 때, 그리고 정책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소요예산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국내외 기본소득 사례를 분석하여 대전형 기본소득의 제도화, 법제화 및 조례제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정책 현실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예산책정에 관한 부분으로, 대전광역시 재무구조 및 정책수혜 대상의 범주,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대전 '2023년 인구 순유입 도시' 만든다”, 『대전일보』, 2021.09.14.

4) 대전광역시, 『2020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1.

5) 대전광역시, 『2020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대전 살림, 한눈에 쏙』 2021.

2. 이론적 검토

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Basic Income)에 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은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조직으로 출범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이다.

BIEN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나 근로의무조건 없이 개개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정기적 현금급여(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라고 정의한다.⁶⁾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에 관한 요건으로는 다음 5가지 요소를 충족할 것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특정 요구없이 지급하는 보편성(Universal)과 퇴직, 자산 유무의 무조건성(Unconditional)에 기반을 두며, 가구(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Individuality),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Periodic), 쿠폰 또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지급(Cash payment)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1〉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충족하는 5가지 요소

보편성(Universal)	소득 유무와 관계없는 지급
무조건성(Unconditional)	근로(의지), 자산 유무와 관계없는 지급
개별성(Individual)	가구(족) 단위가 아닌 개인 대상 지급
정기성(Periodic)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지급
현금지급(Cash Payment)	쿠폰 또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

자료: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내용을 표로 재구성

다만 정책화 과정에서 위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위 5가지 특징 중 일부만 충족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보다 현실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써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6) 기본소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2) 기본소득 기원 및 역사

기본소득에 관한 기원과 역사, 그리고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선택지들 가운데 정책적 도구로써 기본소득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기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영국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 1516), 또는 스페인 출신 철학자 비베스(Johannes Ludovicus Vives, 1492~1540)의 1526년 최저소득 보장 구상에서 근원을 찾고 있으며, 시민권(citizenship)에 기반하여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나 중세적 생존보장까지 그 기원으로 삼기는 어렵다.⁷⁾

이후 18세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은 1769년 ‘토지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라는 논문에서 ‘21세가 되면 무조건적인 일시금(15파운드)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면 시민 연금(10파운드)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기금(National Fund)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기본소득을 구체화한 최초의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페인의 주장은 1770년대 스펜스(Thomas Spence)가 교구주민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므로 지대소득을 평등한 배당으로 분배받아 모두가 최저생활을 하자는 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⁸⁾

이후 프랑스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1794)는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1795)에서 사회보험에 관한 구상을, 역시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 또한 ‘잘못된 산업’(La Fausse Industrie, 1836)에서 기본적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는 탓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숙식제공을 통한 생존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벨기에의 푸리에주의 작가인 죠셉 샤를리에(Joseph Charlier, 1816~1896)는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Solution du problème social ou constitution humanitaire, 1848)에서 푸리에가 옹호한 자산 심사와의 연계, 자신의 제자인 콩시데랑(Victor Considerant)이 옹호한 유급 노동과의 연계를 모두 거부하고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천연 자원의 사용권(usufruct)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시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사상들을 이어갔다. 그는 훗날 ‘사회 문제의 해결’(La Question sociale résolue, 1894)에서 자신이 주장한 권리에 대해 ‘토지 배당’(territorial dividend)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⁹⁾

7) 박홍규,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민주법학』 제36호, 2008, pp.45-47.

8) Tony Fitzpatrick, Freedom and Security, Palgrave, 1999., p.40; Eduardo Matarazzo Suplicy, “시민기본소득: 한국과 브라질을 위한 좋은 제안”, 『한국사회과학』 제31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pp.126~127

1795년부터 1834년 사이에 실시된 영국의 스피햄랜드(Speenhamland) 제도는 기본소득의 선구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기에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임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아동 및 가동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의 보조금과 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를 갖춘 정책이었다.¹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이 ‘자유로 향하는 길: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Roads to Freedom: Socialism, Anarchism, and Syndicalism, 1918)에서 일을 하느냐 여부를 떠나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초를 이어갔다.¹¹⁾ 영국의 밀러(Dennis Miller)도 1918년 생존과 자유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당을 모든 사람에게 국가중앙기금에서 지급하는 국가특별수당(State Bonus Scheme)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특별수당 연맹이 설립되고 1921년 노동당대회에서 이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¹²⁾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는 영국의 더글러스(C.H.Douglas)가 매월 5파운드씩 배당하는 사회 크레딧(Social Credit)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시 평균 노동소득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정도로 수요를 보장하고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상이었으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후 경제학자(J.M.Keynes)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¹³⁾ 한편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인 것으로 추정되며, 네덜란드 노동당에서 활동한 노벨경제학자 수상자 틴버겐(Jan Tinbergen)은 1934년 ‘basisinkomen’(기본소득)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¹⁴⁾

한편 1930년대부터 50년에 걸쳐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제임스 미드(James Meade)는 케인즈-비버리지 복지국가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있는 필수 구성요소를 채워넣는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¹⁵⁾ 1943년 영국의 윌리엄스(Juliet Rhys Williams)는, 비버리지 모델의 사회보장체제는 여성과 아동에게 충분한 방벽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그 보완책으로 조건부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와 급부를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을 주장한 바 있다.¹⁶⁾

미국에서는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2002)이 1968년 폴 사무엘슨, 존 케네스 칼브레이스 등 경제학자 1,200명과 함께 데모그란트(demogrant)로

9) Eduardo Matarazzo Suplicy, Ibid, p.127.

10) Paul Spicker, How social security works, The Policy Press, 2011, p.37; Tony Fitzpatrick, p.41.

11) 기본소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history/>; Eduardo Matarazzo Suplicy, Ibid, p.127.

12) Tony Fitzpatrick, Ibid, p.42; Eduardo Matarazzo Suplicy, Ibid, p.127.

13) Tony Fitzpatrick, Ibid, p.42; Eduardo Matarazzo Suplicy, Ibid, p.129.

14) 기본소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history/>

15) Tony Fitzpatrick, Ibid, p.42; Eduardo Matarazzo Suplicy, Ibid, p.128.

16) Tony Fitzpatrick, Ibid, p.42; Eduardo Matarazzo Suplicy, Ibid, p.129.

불리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여 1972년 조지 맥거번 민주당 후보의 대선 강령에 포함시켰으나, 공화당 닉슨 후보의 승리로 빛을 보진 못하였다.¹⁷⁾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인즈-비버리지 복지모델이 쇠퇴하는 속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1981년 영국의 파커(Hermione Parker)가 'basic income'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를 중심으로 1984년 영국에서 '기본소득 조사그룹'[Basic Income Research Group, 1992년 '시민소득연구센터'(Citizen's Income Study Centre)로 개칭]이 조직되었고, 이후 1986년 최초의 국제회의가 열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가 결성되었다. 오늘날에는 전 지구를 포함하는 기본소득네트워크(BIEN)으로 그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¹⁸⁾

1985년에는 프랑스의 앙드레 고르(André Gorz, 1923-2007)의 경우, 2만 시간 사회적 활동 제공을 조건으로 평생 동안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이행을 전망하면서 소득을 얻을 권리가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1997년 조건 없는 소득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게 되었다.¹⁹⁾

1995년에 들어서면서 판 빠레이스(Van Parijs)는 그의 저서 'Real Freedom for All'(Van Parijs, 1995)에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본소득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는 소득재분배와 같이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²⁰⁾

3) 기본소득의 찬반양론

기본소득론에 관한 기원과 역사적 흐름을 놓고 볼 때 기본소득에 관한 주장은 좌파적 전통 못지않게 우파적 뿌리 역시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인다.²¹⁾ 위에서 서술한 토마스페인(Thomas Paign)과 같은 공화주의 전통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지적 토대를 제공한 하이에크(F.A. Hayek)에 영향을 주었고, 그 또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프리드만의 역소득세(negative

17) 기본소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history/>; Eduardo Matarazzo Suplicy, 앞의 책, p.130.

18) Tony Fitzpatrick, Ibid, p.43.

19) 기본소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history/>

20) Bidanure, Juliana Uhuru, The Political Theory of Universal Basic Incom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1): 481-501.

21) Raventós, D.,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London: Pluto Press, 2007;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2018.

income tax) 제안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모든 가정에 \$3,600을 보장하고, 이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의 제안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나 Food Stamp 등 빈자에게 지급되던 자산조사기반 복지서비스를 없애고 일정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비용 및 기타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을 없애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²²⁾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열거한 기본소득제의 주장 및 실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존 사회정책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소득제도는 지급대상에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자산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빈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의 경우 필연적으로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우려되는데, 기본소득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나아가서 저명한 실리콘밸리의 최고경영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나 크리스토퍼 피사라이드(Christopher Pissarides)와 같은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와 SpaceX의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필두로 버진 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바이두(Baidu)의 수석 연구원 앤드류 응(Andrew Ng),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와 크리스 휴즈(Chris Hughes) 등, 많은 경영인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²³⁾

반면에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두된 기본소득 주장이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더 나은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²⁴⁾

이들은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 로봇이 대부분의 제조를 진행하는 시대가 오려면 멀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The Luddites)의 구호는 분명히 기술진보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대량실업의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충분한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고용직종의 변화만이 있다는 것이다. 근래에도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이 쇠퇴하여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생겨났으나,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를 중심으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

22)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노정호,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5(1), 2018, pp.72-96.

23) Rushkoff, D., Silicon valley's push for universal basic income is — surprise! — totally self-serving. Los Angeles Times, 2017. 7. 21.

24) Greenstein, R., Commentary: Universal basic income may sound attractive but, if it occurred, would likelier increase poverty than reduce it, 2017. 9. 18.;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복지동향』, 221, 2017, p.5-13;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54, 2017, p.81-119.

러한 주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을 뿐 그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대량실업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²⁵⁾

다음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로써, 예컨대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 교수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강화가 기본소득제도의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⁶⁾

이외에도 기본소득제도는 현실적으로 세수확보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유인을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제네바 대학원(Geneva Graduate Institute)의 경제학자 찰스 위플로츠(Charles Wyplosz)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의 비용으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한 바 있다.²⁷⁾ 위 주장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복지혜택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근로유인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찬성론의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모형의 도출

정리하면 기본소득의 찬반양론은 노동과 일자리, 현실가능성의 측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논리는 전통적인 기본소득 개념에서 진화한 형태의 정책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간과 공간은 인간활동을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 진화가 이뤄지게 된다. 시·공간의 축은 단순한 존재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진화의 두 축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의 진화가 수동적 입장에서 주어진 시·공간 범위에 적응하는 과정과 능동적 입장에서 시·공간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주어진 시간 범위는 제약으로 인식할 수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다.²⁸⁾

25) Friedman, M., Ibid.

26) Freedman, D. H., Basic income: A sellout of the american dream. MIT Technology Review, 2016.

27) Swiss voters reject proposal to give basic income to every adult and child, The Guardian, June 5th, 2016.; 노정호, 상계서.

28) TUAN, Yi-Fu. Space, time, place: a humanistic frame. Making sense of time, 1978, pp.7-16.; 소진광,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새마을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5), pp.2-3.

〈그림1〉 시공간 상호작용에 따른 인간 활동의 진화(기대효과)



오늘날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앞서 살펴본 긴 역사를 통해 이어져 왔듯이, 능동적 입장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본소득 정책이 공적 존재로서 국가, 또는 정부(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의 행동(정책)이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에 기본을 두게 된다. 예컨대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공적 존재 차원에서 볼 때, 일자리 감소에 따른 중산층 몰락 현상을 방지한다면 해당 정권은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기본소득의 수혜를 입게 되는 개인은 해당 소득을 주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잠재성은 그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²⁹⁾ 다만 수혜자 다수의 개인에게 보다 많은 소유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재원확보 과정에서 여러 장애에 봉착할 수도 있다. 선진적이고 풍요로운 사회에 거주하는 자산가, 고소득자는 어쩌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즉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특정·불특정 시점에 그가 소유한 것이 감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시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위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목적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변화하는 노동의 성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과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복잡한 지급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그것은 집권 정당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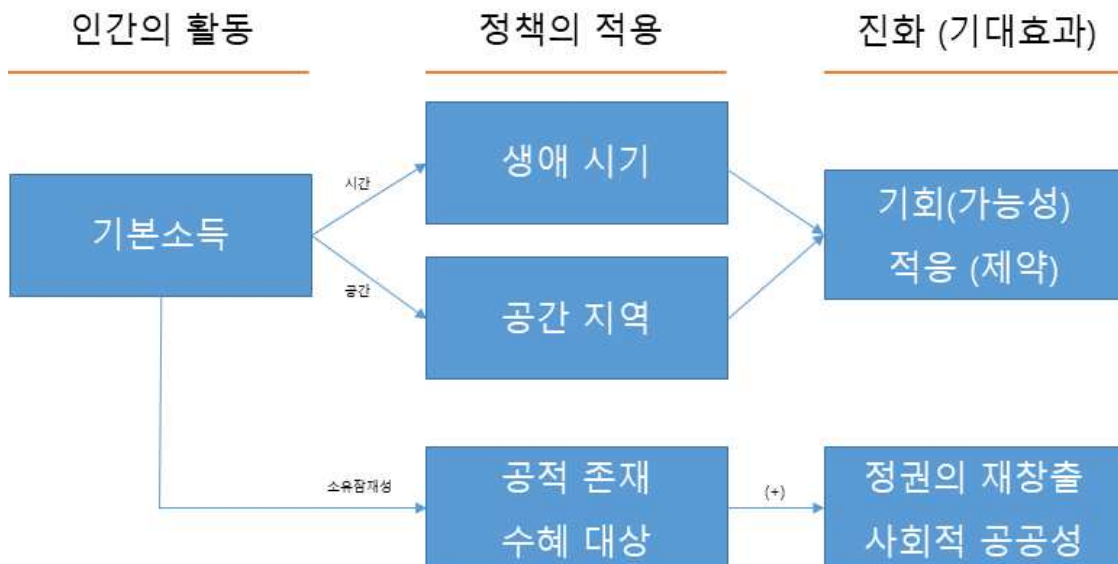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시공간에서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과 진화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살펴본다. 인간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능동적 기회로 인식할 때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인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

29) 나정원, 『소유잠재성』, (엠인터내셔널, 2019).

30) 나정원, 상계서.

면 특정 시기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거나, 또는 처한 상황에 보다 더 잘 적응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활용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성’과 ‘제약’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 단계 진화하거나 또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가로 귀결된다.

〈그림2〉 시공간 상호작용에 따른 기본소득의 진화(기대효과) 및 연구모형



이것을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입하면, 시공간에서 인간활동의 상호작용(기본소득 지급)은 일정 시기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한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집단 역시 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한 단계 진화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어떤 새로운 제도는 일정 공간에 국한하여 실험되고,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시·공간의 축은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 연령대 또는 공간에 있는 집단의 경우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조건을 충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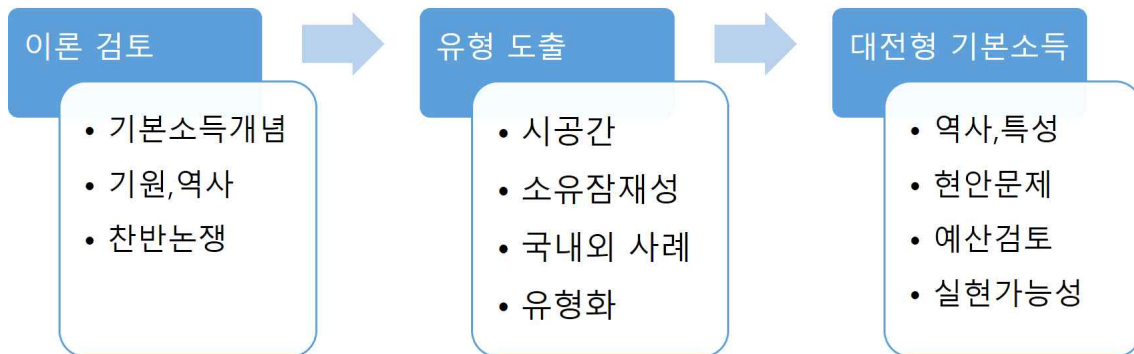
역사적 사건, 또는 시간적 흐름에 의해 발전된 제도의 혜택이 특정 세대에 국한하여 혜택이 돌아갔던 과거를 살펴본다면, 일정 생애시기 대상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성은 충족될 수 있으며, 특정 공간 지역 내에서의 제도 도입 역시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시공간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기본소득 유형을, 시간-공간 충족, 공간 충족, 시간 충족 유형으로 구분하고 위 세 가지의 경우를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나아가서 전통적으로 완전기본소득에 해당하는 5요소(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와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동시에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국내외 기본소득 사례를 통하여 공적존재(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정당, 정책수혜자가 미래 특정·불특정 시점에 기대했던 것과

그것이 양(+)의 방향을 향했는지, 큰 변화가 없었는지, 아니면 음(-)의 방향을 향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은 위 유형화 특성 및 사례에 기반하여 대전형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한반도 내 광역도시로서 대전의 특징, 역사, 현안문제,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단 혹은 그룹에 대한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의 활용가능한 예산이나 관련 조례, 예상되는 논쟁점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3〉 대전형 기본소득 실현방안 연구 프로세스



II.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

수많은 비판과 회의론 속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회과학적 논쟁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은 완전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여러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많은 실험 및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진입하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이와 관련한 실험들이 진행되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 중 해외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꼽히는 미국 알래스카, 성공적 기본소득 지급사례로 손꼽히는 나미비아, 기본소득에 관한 법제화를 이뤄낸 브라질,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핀란드의 대표적 4가지 유형 사례를 통하여 기본소득 정책화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시에 국내의 성남시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 농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의 대표적 4가지 사례를 통하여 제도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

1)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배당기금(The Alaskan's Permanent Fund)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배당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알래스카주의 경제적 불안전성의 역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지역은 1967년 프루도 만(Prudhoe Bay)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척박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후 석유 생산이 진행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이후 석유고갈에 관한 우려는 알래스카주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1976년도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설립은 지속적 경제적 안정화를 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³¹⁾

기금이 설립되고 시간의 장기적 흐름에 따라 석유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졌다. 당시 주지사였던 제이 헤먼드(Jay Hammond)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연간수입을 모든 알래스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당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곧 실행에 옮겼다. 기본소득의 배당은 연령, 소득, 가구구성원 등 조건과 상관없이 알래스카 주민 누구에게나 지급된다.³²⁾

영구기금 배당 프로그램을 통한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 알래스카 주민들

31)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An Alaskan's Guide to the Permanent Fund, 2009. <http://www.apfc.org/home/Content/home/index.cfm>; 김민수,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2018),

32)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Ibid.; <http://www.apfc.org/home/Content/home/index.cfm>; 김민수박병현, “국가 간 기본소득 사례 비교연구”, 『인문사회21』, 9(5), 2018. pp.46-50.

은 매년 홈페이지, 또는 해당기관에 방문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를 완료한 알래스카 주민들, 특히 알래스카 주의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은 중요한 소득원으로, 매월 123~124달러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³³⁾

위의 기본소득 제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본소득의 보장으로, 제이 해먼드 알래스카 주정부가 연임하여 집권(1974-1982)할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 즉 그의 기본소득 정책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정도로, 그 정책적 효과가 양(+)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래스카 거주 주민들 또한 고정수입을 통해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고정수입을 획득하게 되는 만큼 재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 역시 알래스카주 부존 자원인 석유수입에 따른 기금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와 수혜자, 수탁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시공간 상호작용 시각에서 볼 때 오랜 역사를 두고 모든 연령대가 수혜대상이 된다는 점과 주 전체 모든 주민을 포괄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알래스카주 사례는 시간-공간 충족유형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완전기본소득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도 평가된다. 알래스카 주민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보편성), 근로의지나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개별성),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정기성), 쿠폰 또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현금 지급) 지급된다는 점에서 알래스카 기본소득은 완전기본소득의 견고한 형태를 갖춘 정책모델로서 의미를 가진다.

2) 브라질의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ília)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을 제정 및 공포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교육, 보건 등과 연계된 최소소득보장제도로서 통합된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³⁴⁾의 시행이 있었다. 본 법안은 PT당(노동자당) 출신의 룰라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03년 잠정조치 제132호를 통하여 시행되었고, 2004년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흐름 속에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다. 기본소득법이 2004년 1월 8일, 법률 제10,835호로 통과되었고,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그 다음날인 2004년 1월 9일, 법률 제10,836호에 의해 법률로 통과되었다.³⁵⁾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교육, 보건 등과 연계된 조건부 소득보조정책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사한 목적 하에 이전부터 별도로 존재하던 학교 장학금, 현금보조, 가스보조금, 식품카드 각각의 제도들을, 연방정부의 단일등록제도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통합시킨 것이다. 소득보조를 교육 등과

33) 강신철, “기본소득 재원과 사례”, 『기본소득 재원과 사례』, 2021, pp.69-71.

34) bolsa família에서 bolsa는 호주머니, 지갑, 쌈짓돈, 주식 등의 의미를, família는 가족의 의미를 가지므로, 본 영어는 가족의 쌈짓돈, 또는 가족기금으로 번역할 수 있다.

35) 노호창, “기본소득에 관한 개관과 입법 사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36), 2014, pp.433-435.

연계시킨 이유는 교육격차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실인식은 1988년 제정된 신헌법 제212조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구체적 제도화의 한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다.³⁶⁾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극빈층과 빈곤층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기본급여와 가변급여, 청소년 연계 가변 급여를 지급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과 출석률 확보 등을 조건으로 가족 단위로 일정한 액수를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빈곤선에 미달하면 법령에 정해진 해당 액수를 전액 지급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족 중 성인 여성, 대체로 모친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³⁷⁾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수년에 걸쳐 대략 1천2백만 가구 4천만 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에 기여하였고, 이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활성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절대 빈곤선 아래 있는 시민 비율은 2002년 26.72%에서 2006년 19.31%로 감소하는 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뛰어났다.³⁸⁾

요컨대 브라질의 기본소득 실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기본소득법 제정이라는 결과물의 도출로 이어졌고, 집권 여당과 룰라 정권의 장기집권(2003-2011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 주도의 부분적 기본소득 실험은 정권 안정화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존재가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양(+)의 방향을 향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빈곤선에 있던 시민들 또한 직접적인 금액의 수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소득 또한 양(+)의 방향을 향하였고 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지급되는 금액은 충당되는 만큼, 세수 충당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채굴기업, 또는 자산가 등이 가진 자산은 상대적으로 음(-)의 방향을 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Bolsa Familia 프로그램의 뛰어난 정책효과와 그로 인한 정권의 재창출, 사회적 공공성이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 상호작용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인간의 생애 시기와 공간 지역에 대한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 생애 시기의 집단, 또는 일정한 공간 지역에 대한 보편적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위 프로그램은 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과도적 정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최초로 제정된 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은 최소 5년 브라질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40레알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완전기본소득의 2가지 요소를 갖춘 부분기본소득 실험으로써 함의를 가진다.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정기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금지급의 원칙을 가진다는

36) 노호창, 상계서, p. 436.

37) 노호창, 상계서, p. 437.

38) Eduardo Matarazzo Suplicy, Renda Básica de Cidadania 제3판, L&PM, 2008.; 노호창, 상계서, pp. 438.

점에서 부분기본소득의 조건에 부합된다. 또한 기본소득법의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그 제도의 시행은 사회복지 제도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3) 나미비아의 기본소득(BIG: Basic Income Grant) 실험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을 제도로써 도입을 제기한 것은 2002년으로, 당시 세무위원회(NAMTAX)에서는 부유층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BIG(Basic Income Grant)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나온지 2년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4년 히피케푸니에 포함바 대통령 집권 이후 새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³⁹⁾

이 시기 나미비아 교회위원회(CCN: Council of Churches Namibia), 노동자연합(NUNW: Namibian Union of Namibian Workers), 나미비아 NGO포럼(NANGOF: NAMibia NGO Forum), 나미비아 AIDS봉사기구연합(NANASO: NAMibian Network of AIDS Service Organization) 등이 참여하는 BIG연합을 결성하고, 나미비아 정부 사회개발부(DfSD: Desk for Social Development)와 나미비아 복음주의 루터교회(ELCRN: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the Republic of Namibia)가 BIG연합을 대표하여 BIG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⁴⁰⁾

사업의 요지는 나미비아 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 나미비아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실험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2008년 1월부터 2년간 진행하게 될 기본소득 실험은 나미비아 내 빈곤 수준, 접근성, 시범사업 시행에 적절한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오티베로 오미타라(Otjivero-Omitara) 지역이 선정되었다. 지급은 개인 정보가 담긴 스마트 카드 연동계좌로, 매월 15일 N\$100가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나미비아 내 모든 거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노령연금대상자들인 60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60세 미만의 사람들 대상 지급을 목표로 한다. 즉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노인을 제외한 연령대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¹⁾

히피케푸니에 포함바 정권이 출범한 2004년 시기부터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된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에 걸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5~2%가 주민들에게 지급되었으며, 결과 수급자들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기본소득 금액을 제외하고도 29%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⁴²⁾

39) <https://www.centreforpublicimpact.org/case-study/basic-income-grant-big-namibia>

40) 김민수, 상계서, p.42.

41) Claudia Haarmann, Dirk Haarmann, Herbert Jauch, Hilma Shindondola-Mote, Nicoli Michael Samson,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Friedrich Ebert Foundation, 2009.

42) Basic Income Coalition,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2019; 강남훈, "해외 기본소득 실험

그 결과 2004년 집권한 히피케푸니에 포함바 정권(2004~2015)은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되는 2009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으로써 연임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미비아 행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실험은 정권 연장에 긍정적 효과가 더 우선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기본소득 수혜 주민들 또한 N\$100은 물론 그 이상의 소득이 증가되었으니, 이들 주민들에게 또한 기본소득 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다만 향후 기본소득이 본격화될 경우, 고소득자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는 만큼, 이들 집단의 자산은 음(-)의 방향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시·공간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나미비아 기본소득 지급사례는 공간적으로 오티베로 오미타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제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시간적 조건을 제한적으로 충족한다. 다만 공간축으로 보면, 실험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부합한다.

한편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완전기본소득에 근접한 기본소득 실험으로 평가된다. 소득 유무(보편성), 근로의지 및 자산유무와 관계없이(무조건성), 개인 단위로(개별성), 24개월 기간 매월(정기성), 현금지급 원칙이라는 점에서 완전기본소득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노인 연령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시간성 조건을 충족한다.

4)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총리 정권에서 공식화된 핵심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도우파 중앙당(Centre Party),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핀란드인당(Finns Party)의 다소 보수성향의 연합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기간 전국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지급된 프로그램은, KELA가 제시한 원안 대신 25-58세 사이의 무작위 실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⁴³⁾

그러나 2019년 총선결과 시필레가 이끄는 중앙당은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참패함으로써, 당시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은 정권 차원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큰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핀란드 정부는 새로 1당을 차지한 사민당 주도의 5당 연정(사민당, 중앙당, 녹색당, 좌파동맹, 스웨덴인민당 Swedish People's Party)으로 구성되었고, 중앙당은 총선 참패 이후 연정 파트너로 정부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안팎의 내홍을 겪으며 그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 직면하였다.⁴⁴⁾

험의 의의와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4), 2018, p.62.

43) 정순영,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비교”, 『기본소득 시민대학』, 2021, pp.19-24.

44) 서현수, 최한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스칸디나비아연구』, (26), pp.1-45; <https://www.hs.fi/politiikka/art-2000006621038.html>

다만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법(Lakiperustulokeilusta) 제정으로 무작위집단 2,000명 배정에 따른 실험이 가능했는데, 당시 핀란드 사회보험청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2년간 이들에 대한 외부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며 진행한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18년 12월 기본소득 실험 종료 후 2020년 5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국가적 차원의 Top-down 방식의 혁신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⁴⁵⁾

집권 차원에서는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 또한 있었다. 실험결과 기본소득 수급집단 2,000명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4개월간 지급받은 금액만큼의 소득만큼 증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은 기본소득 집단에 양(+)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 집단에 대한 고용효과는 실업급여 수급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존재한다. 집권 여당이었던 시필레 정권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였다. 동시에 2천명 기본소득의 재원이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세금부과가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이었다.

시·공간 상호작용 시각에서는 공간범위를 전국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범위로 지정함으로써, 실험단계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은 무리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일정 공간 내의 실험이 진행되었고 전연령대가 그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례는 기본소득으로서 조건을 충족한다.

한편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완전기본소득의 3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부분기본소득으로 평가된다. 소득 유무(보편성), 근로의지 및 자산유무와 상관없는 지급(무조건성)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강했다. 다만 무작위집단 2,000명에 대한 개인 지급이라는 개별성과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 하였다는 정기성, 그리고 현금지급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부분기본소득의 성격을 갖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 노정호, 상계서. pp.79-84.

2. 국내 기본소득 실험 사례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험 사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월 성남 거주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2만 5천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중앙 정부의 반대로 절반 금액만이 지급되었다. 만 24세 성남시 청년 대상(2,846명) 1회성 청년수당의 지급 실험 결과는 97.1%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생활비 40.9%, 자기개발비 17.9%, 여가문화비 11.1% 등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수준 이상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위 정책의 시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 잘하는 시장, 알뜰한 시 살림을 하는 시장으로 인정받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다. ‘시’ 단위에서 ‘도’ 단위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된 이재명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남경필을 꺾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이 확정된 후,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도에 착수하였다. 2018년 10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소득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위에 근거하여 2019년 4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거주)을 대상(약 17만 5천 명)으로,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 1,753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1,700억원 내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4년간 총 6,866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공간 상호작용 시각에서 보면 위 정책은 공간을 축으로 경기도 지역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을 축으로 놓고 보면 특정 생애시기,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 24세 범주의 청년들에 한정되므로, 제한적 시간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 요건 충족 기준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사업 실험은 완전기본소득 5가지 요소 중, 개별성과 정기성, 그리고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형태로 현금 지급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부분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만24세 청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축 안에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조건도 충족한다.

46) 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26.

2)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실험 외 사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Basic Income Korean Network)는 2010년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17번째로 가입하여 기본소득을 위한 학술/사회활동을 하거나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2000년대 초반기(제1기),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2010년 전후 시기(제2기), 기본소득 찬반논쟁이 전개되는 2016년 이후 시기(제3기)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⁴⁷⁾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산하 지역지부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쉽표 프로젝트’ 실험은 그 대표적 활동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 기본소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고, 814명의 신청자 중 무작위 4명을 선정하여 총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 실험이다.⁴⁸⁾ 연구 결과 예상효과 9가지 항목(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발언권, 식단의 변화, 관계효과, 지역사회·공동체·정치·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교육효과) 중 7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⁴⁹⁾

요컨대 위 실험은 앞서 공적존재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아닌, 국제기구 또는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원 역시 위 기구에서 자체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모집단이 기본소득 수급희망자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실험참가자 역시 4명이라는 점 또한 지적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비슷한 실험들이 지속되고 있고 긍정적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 결과이다.

위 실험들로 공적존재로서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앞의 사례와 다르게 목적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위 단체가 존재를 부각시키고 외연을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양(+)의 방향을 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받는 수혜자 또한 해당 금액과 함께 위 실험에서 세분화한 7가지 항목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그에 유·무형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원 또한 단체 내에서 마련한 것이므로, 자산이 음(-)의 방향을 향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그룹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공간 상호작용 시각에서 보면 전라북도 전 지역을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47)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 2018.

48) 2017년 8월 11일 1차 추첨식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9월 22일 4차 추첨식을 마지막으로 4명의 참가자를 결정하였으며, 한명의 참가자가 선정되면 사전인터뷰를 진행하고 6개월 기본소득 지급이 끝난 후 한달 동안 소비가 완료된 시점에 종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9) 서정희, “새로운 분배실험 :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쉽표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63), pp. 101-146.

공간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시간을 축으로 두고 봤을 때도 전 연령대로 확장을 가정한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및 이와 유사한 실험사례들은 완전기본소득 5가지 요소 중, 개별성과 정기성, 현금지급의 부분기본소득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하여 무작위 선발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결여된 실험이다.

3)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기본소득 사례

농민기본소득은 2018년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남으로부터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이 불과 1~2년 만에 확산된 계기는 오늘날 농업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본격적인 시장개방 이후 농촌지역 거주농민들은 농업 위주의 농가소득 만으로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하기 부족한 실정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농촌공동체 붕괴와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⁰⁾

〈표2〉 주요 광역자치단체 농민수당/노인기본소득 현황

지자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하반기 도내 참여 희망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원, 연간 60만원 지급계획. *여주시를 시작으로, 연천·포천·양평·이천·안성에서는 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을 지급.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 2021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도내 인구 4,000명 가량의 1개 면 선정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약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예정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1년부터 농가(10만 4,000가구)당 연70만원 지급 예정 양구군은 2020년 농민수당 35만 원 지급 예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16만 5,000가구)당 연간 80만원 지급 (상반기 45만 원, 하반기 35만 원)
충청북도	농민수당	2020년 9월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가당 50만원 지급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조례만 제정하고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경상북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제정, 2022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예정

50) 박경철, 『포퓰리즘과 생존 사이: 지자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열풍’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기대』, 30(2), PP.311-332.

		*봉화군은 2019년 50만원, 2020년 70만원 지급, 청송군은 2020년에 50만원 지급, 그 외 영양군, 성주군도 농민수당 준비 중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24만 3,000가구)당 연간 60만원 지급 * 강진군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이름으로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 지급. * 해남군은 2019년에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60만원 지급.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 2,000가구)당 연간 60만원 지급, 2021년부터 어가 포함.
제주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 1월에 농가(5만 5,000가구)에게 지급. 액수 미정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미정)	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보류

자료: 한겨레 2020년 8월 21자 보도/ 박경철, 『포플리즘과 생존 사이: 지자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열풍’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기대』 p.312/ 충남연구원,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1), 2021.05, p.12 내용 재정리

위의 표에서 보듯이 농민기본소득은 지역사회의 소멸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또는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적존재로서 지역 정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 정부는 인구유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지역 정부는 미래 불특정 시점에 주민의 숫자는 음(-)의 방향을 향하게 되며, ‘시’ 단위 지역정부는 ‘군’ 단위로 축소되고,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반면 지역 정부의 농민기본소득 시행은 지역민들의 생계유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고, 이들이 지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심각한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농민기본소득도입이 해당 지역 정권의 지지율 상승과 정권연장에 기여하는 지 여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한편 해당 지역의 기본소득 수혜를 받는 농민은 위에서 약속한 액수의 안정적 수익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채원부담은 장기적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 상호작용 시각에서 해남군을 비롯한 각 지역의 농민소득(수당)은 행정구역 내 농민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을 시행, 또는 계획 중이다. 농촌지역 내 모든 주민이 대상이 아닌 농민가구를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간축을 기준으로는 기본소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간축을 기준으로는 하였을 때는 농민범주 내 전 연령대에 지급되므로 시간 충족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실험은 기본소득의 5가지 요인 중 농민을 대상으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3가지 요건에 부합한다. 다만 개별성의 조건은 지역마다 농민 개인, 또는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정기성의 조건 또한 월별, 분기별, 상반기-하반기, 연례 지급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월별 지급의 경우에만 정기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재난기본소득 지급사례

우리나라에서 《COVID-19》사태로 촉발된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는 기존 복지제도가 가지는 선정절차 복잡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보편성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지는 장점으로, 신속한 금액지급이 가능하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단위 지급 실현으로 개개인 모두에 대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COVID-19》가 국내에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소비는 감소하였으며 지역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방역당국이 개입하여 영업시간 등 경영활동을 제한한 조치는 반발을 불러왔고 경영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조짐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 다수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필요성,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이외 급여소득자 개개인들의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생활자금 지원 수요도 뒤따랐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3월 8일 전 국민 대상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조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내수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여당의 기대와 달리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위 제안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3월 10일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게 된다. 다만 중위소득 80% 이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보편성에 입각한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⁵¹⁾

이틀 뒤인 3월 12일 경기도 화성시가 재난생계수당 지급 발표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3월 24일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경제정책으로써 1인당 10만원 지급 기본재난소득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도의 이러한 판단은 적시성 있는 재원투입을 위한 것으로, 복지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보건 당국과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로 인한 시간낭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경기도의 보편적 경제정책으로써 기본재난소득은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으

51)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52만 7000원’ 시의회 통과”, 『세계일보』, 2020.03.13.

며, 전체 1,329만명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조 3,2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⁵²⁾

다만 비슷한 시기 서울시와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보편성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대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3,300억 원의 자금으로 중위소득 이하 117만 가구 30만~50만원씩 지원하였고,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⁵³⁾

중앙정부 또한 선별적 지급방식을 채택했다. 3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차등지급 결정을 하였으며,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액 결정 과정에서 시간소요 및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었다.⁵⁴⁾ 위의 사례를 교훈 삼아 2021년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목표로 정책 추진을 하였고, 7월 12일 송영길-이준석 당대표가 여야합의를 통해 현실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야당에서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명칭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 ‘상생국민지원금’으로, 하위 소득 88% 개인 대상 지급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으며, 대상자 선별을 위한 준비기간 두 달여가 소요되어 9월 6일부터 5부제로, 출신연도가 ‘0’ 또는 ‘5’로 끝나는 대상자는 9월 10일이 되어서야 25만원 지급 신청할 수 있었다.

하위 소득 88% 지급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잡음도 잇따랐는데,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 직장 또는 지역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액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 것이 문제였다. 보유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 선정 기준에 대한 이의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급대상은 90%선까지 높아졌다.⁵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00%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시·군과 강원도 6개 시·군, 호남권의 전북 정읍시와 전남 15개 시군에서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결정하였다.⁵⁶⁾

정리하면 《COVID-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장점을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2020년 경기도는 보편성에 입각한 절차적 복잡성을 뛰어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으로 골든타임 안에 지역경제 위기에 필요한 금액이 전달될 수 있었다. 동시에 무조건성과 개별성, 현금지급의 요인 또한 포함하고 있으나, 정기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기본소득으로 평가된다.

시공간 상호작용의 시각에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전 주민 대상

52) 정재진,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pp.145-147.

53) “관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중앙일보』, 2020.03.10.

54) “소득하위 70% 이하에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준다”, 『한국세정신문』, 2020.03.30.

55) “국민지원금 형평성논란 위화감 안될말”, 『전북도민일보』, 2021.09.26.

56) “경기도발 ‘100% 재난지원금’ 전국 확산”, 『중부일보』, 2021.09.16.; “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 『충청일보』, 2021.09.27.

으로, 모든 연령대에 지급했다는 점에서도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1년도 우리 정부는 전국민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야당 대표의 결정번복에 따라 복잡한 심사절차에 따른 88%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정책이 선회하면서 신속한 금액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심사기준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1회에 지급에 그쳐 정기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도 지급 당시 가구단위 지원에서 2021년도에는 개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개별지원 요건을 충족하였고, 현금지급 조건도 충족하였다.

3. 소결

기본소득 정책, 또는 실험은 오늘날 국내외 여러 국가와 지역들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기본소득 수혜집단과 대조집단을 비교하였을 때의 만족도, 경제효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각각의 중앙 및 지방정부(공적존재) 또는 정당, 정책 수혜자, 그리고 재원부담 집단이 미래 특정·불특정 시점에서 향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거나, 또는 상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3〉 기본소득 정책/실험 분류

	공적존재		수혜집단		사회공공성 기대효과	시간 축	공간 축
	대상	결과	대상	기대 수령액			
알래스카	지방정부 / 주지사	재선	지역주민	월 \$123-124	지역경제 활성화	☺	☺
브라질	중앙정부 / 대통령	재선	극빈 및 빈곤층	차등 지급	중산층 증가	☺	☺
나미비아	중앙정부 / 대통령	재선	실험지역 주민	월 N\$100	소득 증대	☺	☺
핀란드	중앙정부 / 총리	연임 실패	실업자 2,000명	560유로	취업률 향상 (실패)	☺	☺
성남시/ 경기도	지방정부 / 도지사	도지사 당선	만24세 청년	분기 25만원	청년복지	☺	☺
전북 네트워크	국제단체	인지도 상승	선발된 신청인	월 50만원	삶의질 향상	☺	☺
해남농민 소득	지방정부	미정	농민	연50-80만원	농민소득 보장/ 지역소멸 방지	☺	☹
재난기본 소득	중앙 / 지방	미정	전주민/하위 소득70-88%	1회 25만원/ 1회 10만원	지역경제 위기대응	☺	☺

대체로 재원부담 집단은 정책 실험 과정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의 시행을 가정하였을 때, 재원부담 의무를 가진 집단은 반발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이것을 정책으로 시행한 것은 알래스카의 영구배당기금에 입각한 기본소득이 유일하다. 나미비아 또한 지역 주민 대상 월 N\$100 지급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대한민국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또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다만 전자와의 차이점은 전 주민에 대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알래스카의 재원은 지역의 풍부한 자원에 기반하므로 정책시행에 대한 저항이 없었고, 알래스카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공성의 효과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결과 이 정책을 주도한 공적존재로서의 지방정부와 집권정당은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 알래스카 기본소득정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풍부한 재원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나미비아에서는 히피케푸니에 포함바 정부가 오티베로 오미타라 지역에서의 성공적 기본소득 실험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으로 확장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 및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 연장에는 성공하였다. 2021년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된 재난기본소득 역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위기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맞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청년과 농촌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성남 시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도하였고, 그가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됨으로써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 진행되는 중이다. 한편 해남지역에서 시작된 농민소득은 도입시기가 짧아 정책효과가 지자체장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브라질 사례에서는 극빈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선별적 기본소득 지급시스템을 마련한 결과 중산층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들었으며 룰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권여당이 정권연장에 성공하였다.

이와 반대로 핀란드의 우파정권은 25-58세 대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실험은 실패로 귀결되었는데, 수급집단 2,000명과 대조군의 실험 결과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중앙당 또한 참패를 면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선별적 지급 실험인 기본소득전복네트워크의 실험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9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췄고, 7개 항목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당시 실험을 주도한 국제단체의 인지도 또한 상승하였다.

국내외 각각의 정책 사례들을 살펴본 것에 의하면, 단 1건의 예외사례만 제외하면 공적존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등은 정책시행에 따른 지지율 향상과 정권 안정, 그리고 집권 여당(연합)의 정권재창출을 경험하였다. 핀란드의 사례는 선별적 실험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취업률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정책실험의 결과는 이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핀란드의 유하 시필레 정권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재선에서 실패하게 된다. 다만 위 실험은 특정 범주에 따른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고, 무작위 대상선정 방식의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핀란드의 실험은 선별적 수급자 선정이라는 부분을 볼 때 기본소득의 기준

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시공간의 상호작용 시각에서 볼 때도 공간적으로 핀란드 국가 내에 있는 수급대상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특정 생애시기 또는 연령대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실험을 위한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핀란드 실험이 기본소득 실험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점은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법을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Bolsa Familia 프로그램 역시 조건부 선별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본소득 전 북네트워크 실험 또한 선별적 지급실험을 실시한바 있다. 핀란드-브라질-전북네트워크의 정책은 완전기본소득 5요소 중 정기성과 현금성에만 부합하는 점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국내의 해남발 농민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시공간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공간 안에서의 보편적 지급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농민 범주에 속하는 전연령대 주민들에 대한 보편지급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요소 부합과 관련해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부합하고, 또 지역에 따라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의 원칙 또한 부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22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에 있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위에 부합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1개면 실거주자 4천여 명 전원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1개면 공간 내 모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연령대가 수급대상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5개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한 공간 안에서 보편적으로 무조건 지급하고, 특정 생애시기, 연령대에 차별없이 지급하는 모형은 미국 알래스카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역시 포괄한다. 이 중에서 알래스카 실험에서는 확실한 재원을 근거로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완전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경기도 농민소득은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라는 점에서 완전기본소득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한다.

나미비아 지역 실험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공간 차원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므로 기본소득의 원 취지에 부합한다. 시간 차원으로 보더라도 노령연금수혜 노인이 제외된 모든 주민과 만24세 청년 범주에 속하는 범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 되었으므로,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해남농민소득의 경우 해남 지역의 거주농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간 식별이 모호해진다. 공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정책명칭도 “농민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촌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

〈표4〉 완전기본소득 5요소, 시간-공간 충족 현황

	시간축	공간축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알래스카	O	O	O	O	O	O	O
브라질	O	O	X	X	X	O	O
나미비아	O	O	O	O	O	O	O
핀란드	O	O	X	X	X	O	O
경기도 청년	O	O	O	O	O	△	△
전북네트워크	O	O	X	X	O	O	O
해남농민	O	X	O	O	△	△	O
경기도 재난	O	O	O	O	O	X	O
경기도 농촌	O	O	O	O	O	O	△

Ⅲ. 대전광역시 현황 및 재정분석

1. 대전광역시의 현황

대전광역시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539.49km² 면적에 5개의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이뤄져 있으며, 산하에는 79개 행정동, 177개 법정동, 2,590개 통과 14,604개 반을 두고 있다. 행정조직으로는 2개의 실과 10개국, 2개 본부, 71개 담당관실·과, 의회조직, 15개 사업소, 기타(직속기관 등) 10개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3,97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⁵⁷⁾

역사적으로 대전지역의 발전은 1900년대 초 경부선 대전역 개통과 함께 시작되었다. 읍단위 행정구역이었던 대전은 1917년과 1926년 대전천 서편과 동편의 일부 동리를 편입하여 1931년 대전면으로 승격하고, 1935년 추가로 대전천 동편의 11개 동리를 편입하여 대전부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⁵⁸⁾ 1940년에는 대덕군 외남면과 유면천, 산내면에 속한 9개 동리를 대전 내 지역으로 개편,⁵⁹⁾ 해방 후인 1949년에는 대전시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63년에 외형상 출범 당시 면적의 두 배 이상 확장한 것에 이어 1983년 또 한 차례의 지역확대로 광역도시체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⁶⁰⁾

1989년에는 대전시 출범 40년 만에 대전직할시로 승격하게 되는데, 지역은 시가 출범했던 1949년 대비 15배로 확장된 약 540km², 인구도 8배가 넘는 약 102만 명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한다. 이 시기 처음으로 동구·중구·서구·대덕구·유성구의 현행 5개구 체제를 갖추고, 그 공간적 범위 또한 대덕구에 속했던 주변 촌락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와 동일한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⁶¹⁾

이후 인구 148만 명(2020년 12월 기준)의 광역도시 대전으로의 발전은 서구와 유성구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시청사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신도심과 여러 부심이 형성되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에 인구 증가가 뚜렷하

57) 대전광역시, 『2020 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대전 살림, 한눈에 쏙』, 2020.

58) 1935년 편입된 11개 동·리는 榮町三丁目(현 성남 동)·泉町(효동)·大東町(대동)·旭町(신흥동)과 서편의 龍頭町(용두동)·大寺町(대사동)·北町(북동)·中村町(중촌동)·練兵町(문화동)·寶文町(부사동)·柳町(오류동)이다. 권선정,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大田의 지역 변화와 도시 정체성”, 『문화역사지리』, 28(4), p.58

59) 1940년 대전부 지역확대는 대덕군 외남면과 유면천, 산내면에 속해 있던 9개 동리를 佳陽町(현 가양동)·仙岩町(용운동)·東光町(자양동)·清水町 (관암동)·弘道町(홍도동)·柳川町(유천동)·山手町 (산성동)·石橋町(석교동)·大平町(태평동) 등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권선정, 상계서, p.61.

60) 1963년 대전시 지역확대는 구체적으로 대덕군 유면천 전역(안영리·복수리·사 정리·도마리·정림리·변동리·가장리·내동리·과정리·탄방리·용문리·삼천리·갈마리·월평리·둔산리 등), 회덕면의 대화리·오정리·용전리 그리고 산내면의 옥계리·호동리·가오리·삼정리 등을 포괄한다. 권선정, 상계서, p.62.

61)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도시개발은 신도시와 부도심 조성을 통한 도시 분산화·다핵화를 지향하였다. 그로 인해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 사이 도심 (원도심)과 인근에 집중되어 있던 도시기능 및 인구가 둔산·유성·진잠·신탄진·노은·송촌 등 신도심 과 부도심으로 분산되어 기존의 도심-주변부 이원구조가 아닌 다핵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권선정, 상계서, p.63.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근대도시 대전의 연원이 되는 원도심 지역을 포함하는 동구와 중구의 인구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부터 거의 정체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인다. 결과 원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해당 지역 내 동리들의 통·폐합 현상이 나타났다.⁶²⁾

위의 문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 공간구조를 단핵에서 다핵으로, 교통망구조는 방사형에서 격자와 순환방사의 혼합형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중에서 도심은 기존도심과 둔산도심 2개로 하여 기존도심은 대생활권 중심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둔산도심은 국가행정중심기능 및 도시의 상업·업무·금융 등의 중심지로서, 부도심의 유성은 관광, 위락,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진잠은 물류중심지로, 신탄진은 도시기반산업 중심지로서의 육성을 계획하였다. 특히 시 외곽의 노은지구 개발과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등 도시의 발전축을 서북축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 개발축과 연관성을 가진다.⁶³⁾

인구변화의 시각에서 2014년 153만명까지 늘어난 대전지역 인구는 2020년 12월 현재 14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 100만명대에서 50%에 달하는 인구수 증가를 경험하였고,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중이다. 위에서 서술한 세종시의 출범은 대전의 인구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는 21만명(13.3%)으로, 고령 사회 14% 기준에 근접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2-3년 안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⁴⁾

한편 1993년 EXPO의 개최는 대전을 첨단기술·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전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상징을 EXPO로 연관 시설물로 인식하고,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첨단기술·과학도시로 인식하는 비율이 50%에 이른다. 도시발전에 대한 기대 또한 대학 대덕연구단지 등 교육·연구시설 활성화, 그리고 첨단 과학산업육성에 의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60%로 나타났으며, 이에 맞춰 정부기관, 기구, 대학, 기업의 R&D센터 등 연구거점시설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다.⁶⁵⁾

EXPO 개최 2년 뒤인 1995년 민선시대가 도래와 함께 대전지역 시정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협치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적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출범에 맞게 대전의 도시문제는 대전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장기적 추세의 시각에서 10대의 장래희망 거주지로 대전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2-3년 내 고령사회로 진입 등을 고려해볼 때, 인구감소의 문제는 오늘날 대전 거버넌스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2) 대전광역시에서는 2003년 3월 전국 최초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권선정, 상계서, p.64.

63) 김홍태, "지방자치 20년 대전도시계획 변화와 발전방향", 『대전개발포럼』, pp.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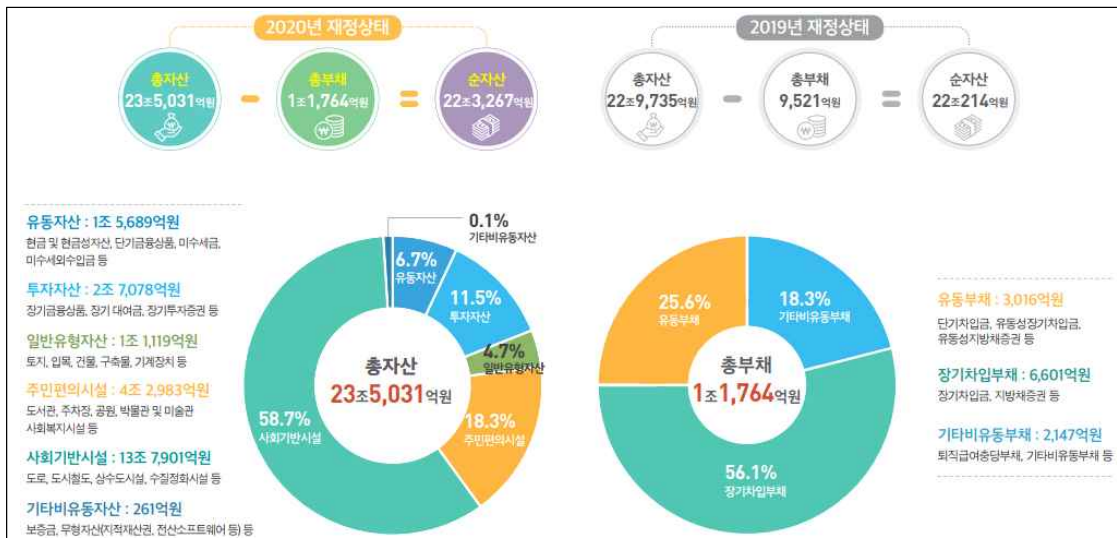
64) 대전광역시, 『2020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1.

65)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실시한 시민의식조사는 주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2. 대전광역시 재정 분석

대전광역시의 2020년 12월 현재 총자산은 23조 5,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96억원(2.3%)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 1조 1,764억원을 뺀 순자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53억원(1.4%)가 증가한 22조 3,267억원으로, 비교적 탄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5〉 대전광역시의 전년대비 2020년 재정상태



자료: 대전광역시, 『2020회계 결산개요』, 2021.

총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13조 7,901억원(58.7%)에 달한다. 유동자산은 1조 5,689억원(6.7%)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투자자산은 2조 7,078억원(11.5%)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이며, 일반유형자산은 1조 1,119억원(4.7%)으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다. 주민편의시설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을 포괄하는 자산으로 4조 2,983억원(18.3%)에 달한다. 기타비유동자산은 261억원(0.1%)으로,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총부채는 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 등을 포괄하는 장기차입부채가 6,601억원(56.1%)로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으로 3,016억원(25.6%)이고, 기타비유동부채는 2,147억원(18.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의 결과는 2020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세입은 6조 5,272억원, 세출은 5조 8,055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각각 8.1%, 11.2%로 완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 7,217억원의 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전년도 이월금 3,053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7억원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순세제잉여금은 4,067억원에 달한다.

〈표5〉 2020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세부내역(단위: 억원)

구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제 잉여금
계	6조 5,272	5조 8,055	7,217	3,053	97	4,067
일반회계	5조 3,707	4조 9,068	4,639	1,642	96	2,901
공기업특별회계	4,278	2,671	1,607	875	0	732
기타특별회계	7,287	6,316	971	536	1	434

자료: 대전광역시, 『2020회계 결산개요』, 2021.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으로 세분화한 경우에도, 잉여금과 순세제잉여금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반회계에서는 잉여금이 4,739억원으로, 이월금 1,642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 한해 순세제잉여금 규모는 2,901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세출 규모로만 볼 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와 비교해서 그 규모는 가장 적지만, 세입 예산 대비 37.5% 수준의 1,607억원 잉여금, 이월금 87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순세제잉여금 규모는 732억원에 달한다. 기타특별회계 또한 971억원의 잉여금과 이월금 536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억원을 제외한 순세제잉여금 규모는 434억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이르기까지 잉여금/순세제잉여금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 주요 광역시도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자료: 대전광역시, 『2020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대전 살림, 한눈에 쏙』 2021.

한편 재정 안정성의 시각에서 2020년 대전광역시의 총자산(23조 5,031억원) 대비 총부채비율(1조 1,764억원)은 5.1%로, 전국 7개 광역도시 서울(10.31%), 광주(10.2%), 부산(9.74%), 울산(8.96%), 대구(7.62%), 인천(5.69%)와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7〉 2016-2020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잉여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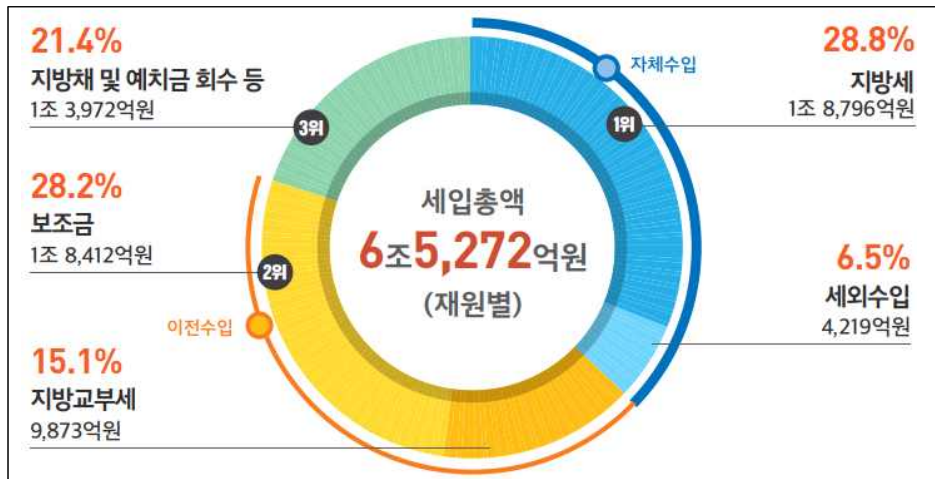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2020회계 결산개요』, 2021.

지난 5년간 대전광역시의 세입과 세출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입은 2016년 4조 7,768억원 대비 2020년 6조 5,272억원으로 5년간 평균 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은 2016년 3조 7,909억원 대비 2020년 5조 8,055억원으로 5년간 평균 1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평균 잉여금은 2016년 9,860억원에서 2017년 5,285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말 잉여금은 7,217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세입 총액 6조 5,272억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지방세 1조 8,796억원(28.8%)과 보조금 1조 8,412억원(28.2%)로, 지방세와 보조금 세입의 비중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조 3,972억원(21.4%), 지방교부세 9,873억원(15.1%), 세외수입 4,219억원(6.5%)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에서 주요 변동 항목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1,289억원(29.2%) 증가, 지방소득세 168억원(5.0%) 증가, 지방소비 세율 인상(15%→21%)에 따른 지방소비세 702억원(19.4%) 증가, 담배소비세 65억원(7.2%)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단축운영 및 환급금 증가로 인한 지난 년도 수입 111억원(-88.2%) 감소, 레저세 134억원(-82.2%)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림8〉 대전광역시의 2020년 부문별 세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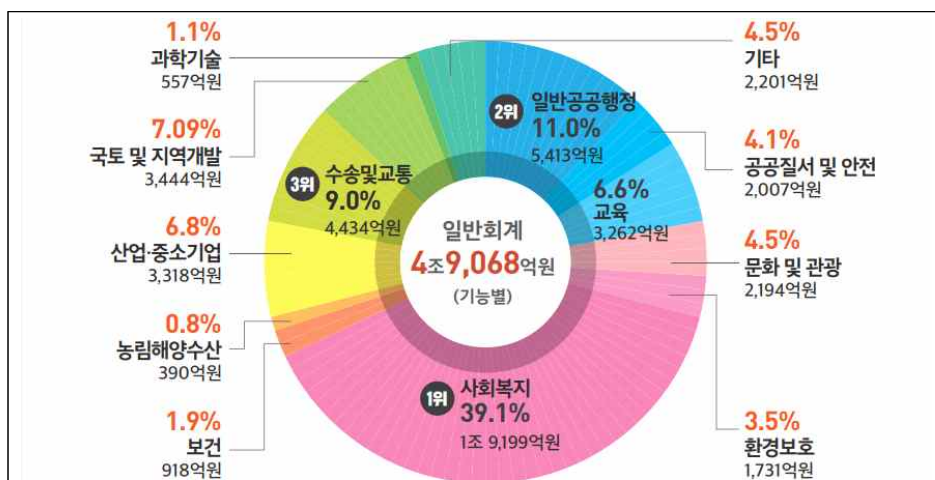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2020회계 결산개요』, 2021.

세출 총액 5조 8,055억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사회복지 1조 9,199억원(39.1%)으로 2019년 대비 7,490억원(14.8%)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5,413억원(11.0%), 수송 및 교통 4,434억원(9%), 국토 및 지역개발 3,444억원(7.1%), 산업·중소기업 3,318억원(6.8%), 문화 및 관광 2,194억원(4.5%), 공공질서 및 안전 2,007억원(4.1%), 환경보호 1,731억원(3.5%), 보건 918억원(1.9%), 과학기술 557억원(1.1%), 농림해양수산 390억원(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출에서 2019년 대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부문은 환경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62.1%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국토 및 지역개발(34.9%), 공공질서 및 안전(26.7%), 사회복지(18.6%), 수송 및 교통(15.6%)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9〉 대전광역시의 2020년 부문별 세출현황



자료: 대전광역시, 『2020회계 결산개요』, 2021.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세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는 부문은 ‘사회복지’로 2020년 기준으로 1조 9,199억 원으로 전체의 39.1%를 지출하였다. 사회구성원의 일정한 생활안정 및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는 시각에서 볼 때, 사회복지 예산은 잠재적인 대전광역시 기본소득의 재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인간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강한 정책자금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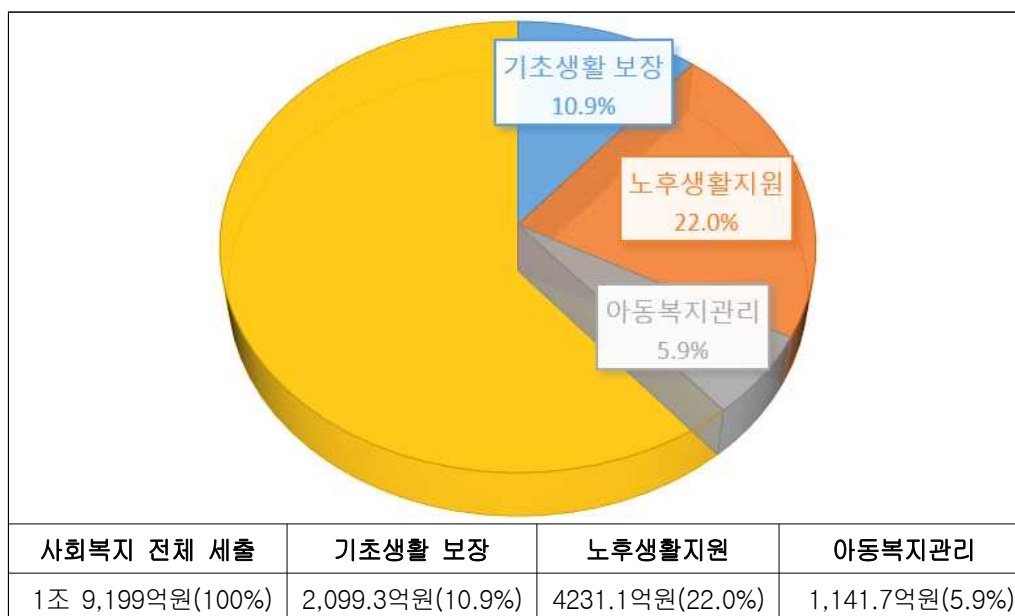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최소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시민들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범주에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대전광역시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2020년 기준 2,099.3억 원의 세출.

둘째, 노후생활지원 사업으로, 2020년 기준 4,231.1억 원의 세출.

셋째, 아동복지관리 비용으로, 2020년 기준 1,141.7억 원의 세출.

〈그림10〉 2020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세출 중 기본소득 중복 금액



정리하면 대전광역시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2020년 사회복지 세출 기준으로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7,472.1억원, 전체 세출의 38.8%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대전형 기본소득정책이 실현된다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던 복지에 산을 포함해야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위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과목을 명시한 것이다.

〈표6〉 기본소득 중복 금액 세부 항목(단위: 억원)

항 목	과 목	지출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94.6
	교육급여	3.7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8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배양	286.0
	자활지원	208.2
합 계		2,099.3
노후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	3,723.5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	503.6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3.9
	노인건강 진단	0.1
합 계		4,231.1
아동복지관리	아동수당	847.7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0.3
	가정양육수당 지원	293.7
합 계		1,141.7
총 액		7,472.1

기초생활보장, 노후생활지원, 아동복지관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231.1억원이 지출된 노후생활지원 항목이 꼽힌다. 이 중에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이 각각 3,723.5억원, 503.6억원으로, 전체 노후생활지원 지출 대부분(9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3.9억원, 노인건강 진단이 0.1억원의 금액이 지출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2,099.3억원을 총지출된 기초생활보장으로, 이 중에서도 생계급여가 1,594.6억원으로 76%로 위 항목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배양 286억원(13.6%), 자활지원 208.2억원(9.5%),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8억원, 교육급여 3.7억원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관리 항목의 전체 세출은 1,141.7억원을 보이고 있다. 세부 과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848억 규모(74.2%)로 지출한 아동수당(및 사업추진비)으로 아동복지관리 항목 세출의 3/4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다음은 보육비를 수급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293.7억원(25.8%) 규모의 세출이 발생하였다.

IV. 대전광역시 기본소득제도 설계

1. 대전시 기본소득의 목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따라 특정 공간에 존재했던 인간의 역사를 원시와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시대구분이 당대 사회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시간 흐름에 따른 진보, 현실에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시간에 관한 유연성과 공간의 확장에 기반하여 발전해나갈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기본소득 정책 역시 대전이라는 공간 내에 거주하는 대전 시민 개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떤 시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대전 시민 모두가 생애주기에 따라 인간적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획득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한나 아렌트(E. Frazer, Hannah Arendt)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행위(action), 작업(work)으로 구분하고, 노동 안에서의 자유 또는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노동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물학적 필요와 욕구에 순응하여 삶-생명의 재생산을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반복적-소모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행위는 자유롭게 자신의 독특함, 고유성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자기 현시적 활동이다. 이때 인간들의 자유는 수단적-전략적 선택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 무목적적이고 자발적인 시작 가능성에 가까우며, 자유행사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행사 자체를 통해 자신을 주체로 드러내고, 그런 주체적 인간들과 공동의 세계를 형성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작업 활동은 문명화된 인간의 욕구에 보다 부합하는 활동이자, 인공적인 사물의 세계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물리적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활동이다.⁶⁶⁾

한나 아렌트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자연필연성과 운명성에 기반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반복적인 소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행사, 즉 자기결정성의 범위가 넓어졌을 때 공동체의 행복도가 상승하게 된다. 오늘날 영·유아와 아동 대상의 보편소득 또한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범위를 보다 넓혀주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령소득 역시 모든 노령인구에게 주기적인 최소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의 자기결정성 범위를 넓혀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66) E. Frazer, Hannah Arendt: The risks of the public realm,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2(2), 2009, pp.203-223.;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9.

2. 대전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도(안) 설계

정리하면 오늘날 기복소득 논의는 보편적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다. 대전광역시의 기본소득제도 역시 생애주기별로 시민들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표7〉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도(안) 산출근거(대전)

생애 주기	기본소득제	산출근거
성인	청년기본소득	대전 19세 인구수(최근 3년 평균) * 30만원 = 18,890명 * 12개월 * 30만원 = 680억원
결혼	결혼수당	대전 혼인건수(최근 3년 평균) * 100만원 = 6,652건 * 100만원 = 66.5억원
출산	출산수당	대전 신생아수(최근 3년 평균) * 100만원 = 8,210명 * 100만원 = 82억원
육아	아동기본소득	대전 0~6세 인구수(최근 3년 평균) * 30만원 * 12개월 = 79,770명 * 30만원 * 12개월 = 2,872억원
교육	저학년 어린이 기본소득	초 1,2,3 숫자(최근 3년 평균) * 1만원 * 12개월 초 4,5,6 숫자(최근 3년 평균) * 2만원 * 12개월 = (41,848*1만*12) + (42,454*2만*12) = 152억원
	고학년 어린이 기본소득	중 학 생 숫자(최근 3년 평균) * 3만원 * 12개월 고등학생 숫자(최근 3년 평균) * 5만원 * 12개월 = (42,940*3만*12) + (49,100*5만*12) = 449억원
퇴직	퇴직자 기본소득	(비경제활동인구-15~23세인구) * 30만원 * 12개월 = (485,330명-166,804명) * 30만원 * 12개월 = 1조 1,467억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kostat.go.kr/>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이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의 최근 3년 간 평균 18,890명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안은 최대 연 680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대전시 인구의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결혼수당은 대전 정착의 경제적 유인 중 하나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의 혼인 건수는 6,652건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66.5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 결혼수당을 지급하면 이 지역의 신혼부부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 대전에 신혼집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역시 노동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준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 3년간 대전 신생아 수 평균 8,210명에게 1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려면 8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음 0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기본소득은 현재 이원화된 양육·아동수당과 보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다. 현행 보육수당은 보육기관에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현행 육아수당과 보육기관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보육수당은 대상을 선별하고 사용금액을 점검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반면에, 이 두 가지 수당을 합친 아동기본소득은 대상 선별 및 지원금 집행과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아동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대전지역 0~6세 인구수 79,770명에게 30만 원씩 매월 지급할 경우 2,8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서 2020년에 지급한 양육 및 아동수당 1,141억 원을 제외하면 1,731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면 된다.

학령기 어린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익히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 받고 있다는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복지제도는 수혜대상이 부모라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의 자기결정성 확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학령연령대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면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용돈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느끼게 될 소외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들이 공동체에 관한 인식과 상호배려로 인간관계 맺는 법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주요 소비처인 매점 등에 기부함을 설치하게 되면 잔돈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어린이 대상 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충북 보은군 소재 판동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주 2천원 매점화폐를 지급한 예를 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를 찾기 힘든 농촌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간식과 학용품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매점을 열었는데,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할 때 불평등을 경험하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 당국에서는 어른이 수직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 몫의 용돈을 보장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경제생활과 공동체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어린이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였다. 어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난 뒤 학교에서는 서로 사주기와 나눠먹기가 진행됨으로써 학생들 관계가 개선되었고, 계산하고 남은 거스름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잔돈샘’이라는 명칭의 기부함에 기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기부습관을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는 평등을 넘은 나눔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였다.

용돈 기본소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필요한 용돈의 상승압력 또한 높아지게 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 필요한 금액을 차등화한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를 세분화하여, 초등 1,2,3학년 대상 41,848명에게 1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초등 4,5,6학년 42,454명에게 2만원, 중학생 42,940명에게 3만원, 고등학생 49,1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학생기본소득을 위한 총 소요 예산은 601억원이다.

다음은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보편화가 진행된 생애 단계별 진학소득의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젊은 부모세대의 자기결정성의 범주를 축소시키게 된다. 이에 입학 시기에 따른 진학소득의 지급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자녀 입학부담에 관한 인식에 공감하면서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대상으로 지급되던 30만원의 지원금을 초등학교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에 합의하였다. 사업비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 주체별로 예산을 4:3:3으로 분담하여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한 교육기본소득으로 규정한다. 지급 첫해인 2021년 약 13만 6,700명에게 30만원씩 총 410억원이 지급된 이 진학수당은 생애주기에 걸쳐 3회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퇴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은 통계청 기준으로 대전지역 비경제활동인구 485,330명 가운데 15-23세 연령대 166,804명을 제외한 318,526명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지원 4,231억원을 제외하면 약 7,2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표8〉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지급안-기존 복지예산 및 추가예산(대전지역)

생애주기	기본소득제	소요 예산	기존 복지예산	추가 예산
성인	청년기본소득	680억원	-	680억원
결혼	결혼수당	66.5억원	-	66.5억원
출산	출산수당	82억원	-	82억원
육아	아동기본소득	2,872억원	양육·아동수당 1,141억원	1,731억원
교육	저학년 어린이기본소득	152억원	-	601억원

	고학년 어린이 기본소득	449억원		
퇴직	퇴직자 기본소득	1조 1,467억원	노후생활지원 4,231억원	7,236억원

3. 대전시 기본소득제도 법제화

대전광역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려면 자치법규로 볼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2021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으로 지자체의 기본소득 조례는 135개로,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논산시의 조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비롯하여 농민과 농촌 시범사업, 재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총 5가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총 19조로 이뤄진 기본 조례의 경우 그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 실태조사,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을 서술하고, 운영세칙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조례가 농민, 농촌시범, 재난, 청년 4개 조례의 상위 법규라는 것을 서술하였다. 앞의 4개 기본조례들에서도 책무와 지급대상, 기본계획, 신청, 평가에 이르는 절차적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근거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기준과 지급,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행규칙과 부칙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1년 11월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제정한 기본소득 관련 조례들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되거나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11월 15일 의왕시 청년기본지급조례가 수정된 것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의 Bottom-up 차원의 제안과 그에 따른 조례 제정, 그리고 조례 수정 작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리하면 지역의 기본소득 관련 조례는 현행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V. 결론

1977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꼽히는 건강보험(이전 의료보험) 제도가 당시에는 그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10년 전 처음 시작한 무상급식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었듯이, 이제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 상식화되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제도가 실행되거나 실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첨단 정보기술 발전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희석시키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실업을 비롯한 사회문제로 이어졌고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현황과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는 타 광역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세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육아수당과 보육수당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선별복지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가운데 무조건성, 정기성, 보편성 등 대부분의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2년 간 지급한 온통대전 지역화폐 10~15% 환급금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소비 여력이 있는 시민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라서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다.

국내외 기본소득제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대전시의 재정상태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전시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도를 설계하고 소용예산을 산정해보았다. 대전 시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급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재정규모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 달에 10만원씩만 지급하더라도 매월 1500억 원이 소요되므로 매년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전시 1년 예산의 30%에 해당한다. 현재 복지예산 총금액과 맞먹는 규모라서 기존의 복지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지급성이 높은 연령대에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징검다리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등 다섯 가지이다. 이중에서도 무조건성과 보편성 및 개별성은 인간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고 정기성과 현금성은 반드시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소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여섯 번째 요건으로 충분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주관적이고 사회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은 기준이라서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새롭게 시도되는 기본소득제도가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하기만 해도 부분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분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형 기본소득이나 예술인 기본소득 등 명칭으로는 기본소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직군이나 산업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수혜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다시 불공정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류 역사 이래 오랫동안 사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용해 온 시간과 공간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농민 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민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구분할 경우 절대적 기준이 되므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노령층이나 청년층, 유아층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범주를 판단할 때 시간과 공간을 먼저 적용하고,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선별적 복지제도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대전의 재정현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하였다. 생애주기별로 아동기본소득, 저학년 어린이 기본소득, 고학년 어린이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결혼수당, 출산수당, 퇴직자 기본소득 등으로, 해당 연령층의 인구수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기본의 선별적 복지제도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추가되는 예산을 산정하였다. 대상인구 수도 많고 실효성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퇴직자 기본소득은 7,236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므로 우선 순위에서는 가장 뒤로 미루었다. 24세 이후 모든 대전 시민 가운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무직자들 모두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수당은 예산 규모가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나머지 육아수당, 학생 용돈수당이나 청년수당, 결혼 및 출산 수당 등은 모두 합쳐도 연 3,160억 원밖에 추가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전시 예산의 이월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행정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최근 논의가 시작된 탄소세나 국토보유세와 같은 추가 세원이 마련된다면 퇴직자를 위한 기본소득도 수년 내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효과와 필요성은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더 이상 도입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생애주기별로 어떤 연령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재정여력으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제들이 있고,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면 퇴직자 기본소득과 같이 대전 시민 전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4), 2018, pp.62-70.
- 강신철, “기본소득 재원과 사례”, 『기본소득 시민대학』, 2021, pp.69-75.
- 권선정,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大田의 지역 변화와 도시 정체성”, 『문화역사지리』, 28(4), pp.53-68.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 아카데미』, (59). 2018, pp.455-462.
- 김흥태, “지방자치 20년 대전도시계획 변화와 발전방향”, 『대전개발포럼』, pp.4-26.
- 김민수,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2018.
- 김민수·박병현, “국가 간 기본소득 사례 비교연구”, 『인문사회21』, 9(5), 2018, pp.97-112.
-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복지동향』, 221, 2017, pp.5-13.
- 나정원, 『소유잠재성』, 엠인터내셔널, 2019.
- 노정호,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5(1), 2018, pp.72-96.
- 노호창, “기본소득에 관한 개관과 입법 사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36), 2014, pp.403-456.
- 대전광역시, 『2020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1.
- , 『2020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대전 살림, 한눈에 쏙』, 2021.
- , 『2020회계 결산개요』, 2021.
- 박정철, 『포폴리즘과 생존 사이: 지자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열풍’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기대』, 30(2), 2020, pp.311-332.
- 박홍규,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민주법학』, 38, 2008, pp.123-147.
- 서정희, “새로운 분배실험 :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실험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63), 2019, pp.101-146.
- 서현수·최한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스칸디나비아연구』, (26), pp.1-45.
- 소진광,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새마을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5), 2016, pp.1-28.
-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2018, pp.45-70.
- 울리히 벡 저,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 거름, 2000.
-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54, 2017, pp.81-119.
- 임미원, “아렌트의 탈노동적 정치 관념과 기본소득 구상”, 『법학논총』, 36(4), pp.1-29.
- 정순영,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비교”, 『기본소득 시민대학』, 2021, pp.19-24.
- 정재진,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pp.133-168.
- 충남연구원,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1), 2021.05.
-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9.
- Eduardo Matarazzo Suplicy, “시민기본소득; 한국과 브라질을 위한 좋은 제안”, 『한국사회과학』 31, 2009, pp.121-141.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An Alaskan's Guide to the Permanent Fund, 2009.

Claudia Haarmann, Dirk Haarmann, Herbert Jauch, Hilma Shindondola-Mote, Nicoli Michael Samson,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Friedrich Ebert Foundation, 2009.

Bidadanure, Juliana Uhuru, The Political Theory of Universal Basic Incom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1): 481-501.

E. Frazer, Hannah Arendt: The risks of the public realm,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2(2), 2009, 203-223.

Freedman, D. H., Basic income: A sellout of the american dream. MIT Technology Review, 2016.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aul Spicker, How social security works, The Policy Press, 2011.

Raventós, D.,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London: Pluto Press, 2007.

Tony Fitzpatrick, Freedom and Security, Palgrave, 1999.

Tuan, Yi-Fu. Space, time, place: a humanistic frame. Making sense of time, 1978, 7-16.

Greenstein, R., Commentary: Universal basic income may sound attractive but, if it occurred, would likelier increase poverty than reduce it, 2017. 9. 18.

Rushkoff, D., Silicon valley’s push for universal basic income is – surprise! – totally self-serving. Los Angeles Times, 2017. 7. 21.

Swiss voters reject proposal to give basic income to every adult and child, The Guardian, June 5th, 2016.

“경기도발 ‘100% 재난지원금’ 전국 확산”, 『중부일보』, 2021.09.16.

“국민지원금 형평성논란 위화감 안될말”, 『전북도민일보』, 2021.09.26.

“소득하위 70% 이하에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준다”, 『한국세정신문』, 2020.03.30.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52만 7000원’ 시의회 통과”, 『세계일보』, 2020.03.13.

“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 『충청일보』, 2021.09.27.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중앙일보』, 2020.03.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kostat.go.kr/>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https://basicincome.org/history/>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korea.org/introduction_bien/

<http://www.apfc.org/home/Content/home/index.cfm/>

<https://www.centreforpublicimpact.org/case-study/basic-income-grant-big-namibia/>

<부 록>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시행 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30호, 2021. 3. 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계층별 또는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2. 시민참여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계층별 또는 분야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
3. 지역경제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
4. 사회복지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도 담당관·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 ⑥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평가) 도지사는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중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를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본소득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와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1. 3. 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461호, 2021. 3.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